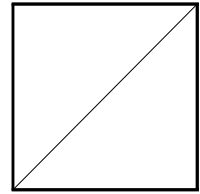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371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11. 4. (제 19 차)

의
결
사
항

한화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11. 4.

1. 의결주문

한화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함

2. 제안이유

한화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한화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보험계약 해지 및 취소 업무 부당)'이 적발되어 「보험업법」 제196조에 따라 과징금 1,834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하며,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은 「보험업법」 제209조에 따라,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운영 불철저'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은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에 따라 과태료 199.5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 「보험업법」 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항 제2호, 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9호

- 舊「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7호, 제9호,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9호
-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항 제1호, 제59조의2(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9]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6항,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항, 제43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항, 제51조(과태료) 제1항 제1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3]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제3호,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 제3호·제5호, 제32조(내부사용자 비밀 번호 관리) 제2호·제3호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망분리 적용 예외) 제1항, 제3항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16차(2020.7.22.) 및 제19차(2020.9.4.) 제재심의위원회 심의필

<별지>

한화생명보험(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조치대상 : 한화생명보험(주)

- 과징금 1,834백만원 및 과태료 199.5백만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자산의 무상제공)

□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수익성 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화생명보험(주)(이하 '회사')는 대주주(계열회사)인 (주)○○○○○○○○○○○○○○○○○○(이하 '○○○○○○○○○○○○○○○○○○')가 면세점 특허신청**을 이유로 2015.5.26. 회사 소유 여의도 소재 63빌딩에서 임대 중인 일부 공간에 대해 임차를 요구하자, 기존 임대차 계약(2015.1.1.~2015.12.31.)의 중도 해지에 따른 배상비용 발생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2015.5.28. ○○○○○○○○○○○○와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 '○○'에 포함된 계열회사(회사 지분 1.75% 소유, 2019.12월말 기준)로서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른 회사의 대주주에 해당

**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위해서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제20○○-○호)'에서 정하고 있는 매장 및 보관 창고를 특허신청 기일(2015.○.○.)까지 필수적으로 확보할 필요

- ○○○○○○○○○○○가 2015.7.10. 면세점 특허 ‘사전승인’을 받아, 회사는 ○○○○○○○○○○○가 63빌딩에서 면세점 영업을 개시(승인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할 수 있도록 2015.8.31. 기존 임차인인 □□□□□□□□(주)**(이하 ‘□□□□□’)를 퇴거시키고 면세점을 입점 시키는 과정에서,

* ‘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관세청, 제○○○○-○○호)’에 따라 ○○○○○○○○○○는 시내 면세점 특허 취득에 대한 사전승인 결과를 통보(2015.○.○○.)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사전승인이 취소되거나 특허가 불허될 수 있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 ‘○○’에 포함된 계열회사에 해당 ((주)○○가 □□□□□의 지분 50.62%를 소유, 2019.12월말 기준)

다음 (1), (2)와 같이 ○○○○○○○○○○○의 긴급한 사정으로 촉발된 기존 임차인의 영업중단 손실 배상비용 등 72.2억원을 회사 스스로 부담하고,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 동안의 관리비 7.98억원을 수취하지 않는 등 대주주(계열회사)에게 총 80.18억원의 금전적 이익(현금 자산)을 무상 제공한 사실이 있음

(1) 면세점 입점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부당한 부담

□ 2015.3월부터 회사는 □□□□□ 및 ○○○○○○○○○○○와 함께 ○○○○○○○○○○○가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의 기존 임대차 공간에 입점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 동 협의 과정을 통하여 회사는 ○○○○○○○○○○○와 면세점 입점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 영업중단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 연회장(국제회의장 등) 예약 취소 위약금, 파빌리온(부페식당) 등 식음료 매장의 영업 손실 등

- 2015.5.26. 회사는 면세점 특허신청 기일(2015.6.1.)까지 면세점 매장을 확보해야 하는 ○○○○○○○○○○○○로부터 임차의향서를 받고, 불과 2일이 경과한 2015.5.28.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임차인을 중도 퇴거시키는데 따른 손해배상 범위, 금액, 부담 주체 등에 대해 ○○○○○○○○○○○○와의 가계약서에 반영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감정평가는 임대차 가계약 체결 약 6개월 후인 2015.11.20.에서야 사후적으로 실시

- 2015.7.10. 회사는 ○○○○○○○○○○○○가 면세점 특허사업자로 ‘사전 승인’ 된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특수한 사정을 받아들여,

- 임대차 계약기간(2015.1.1.~2015.12.31.) 만료가 4개월 남아있는 □□□□□를 2015.8.31. 중도 퇴거시킴과 동시에 ○○○○○○○○○○○○ 측에 임대공간을 면세점에 맞도록 건물 구조를 확장·변경하는 공사(이하 ‘면세점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용하였음

- 회사는 면세점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야 ○○○○○○○○○○○○와의 임대차 본계약 체결을 위해 ‘임대료 감정평가(2015.11.5.~2015.11.19.)’와 기존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 손해배상금 감정평가(2015.11.20.~2015.11.24.)’를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 임대료는 회사와 ○○○○○○○○○○○○가 각각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균하여 결정하였고, 손해배상금은 회사와 □□□□□가 각각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균하여 결정하였음

- 2015.12.15. 회사는 ○○○○○○○○○○○○와 임대차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구조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및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임대료 감정평가액’을 감안한 임대료 월 4.8억원만을 본계약에 반영한 반면,

- ‘영업손실 손해배상금 감정평가액’을 감안한 손해배상금 72.2억원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자인 ○○○○○○○○○○○○에게 본계약 또는 별도의 청구 행위를 통해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 채*,

* ○○○○○○○○○○○○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므로 ○○○○○○○○○○○○의 면세점 입점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를 보전하고 영업을 개시하는 것이 타당

- 2015.12.31. 기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발생하지 않았거나 대주주(계열회사)와의 특수한 거래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을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배상금 72.2억 원을 면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고 대주주(계열회사)에게 간접으로 금전적 이익(현금 자산)을 무상 제공*한 사실이 있음

*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두23935 판결] 보험계약자인 고객들이 납입하는 보험료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회사의 자산은 종국적으로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에 충당되어야 할 재원으로서 이를 보존하여야 할 고도의 공익상 필요가 있으므로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보험회사의 자산을 자신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함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매우 큼

<참고>

면세점 임대차 계약 체결 진행 경과

일자	진행 경과
2015. 4.23.	○○○○○○○○○○○○와 한화그룹은 한화생명 소유 63빌딩을 면세점 부지로 선정한 사실과 그 선정 이유를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 발표
2015. 5.26.	○○○○○○○○○○○○가 면세점 사업 특허 신청을 위해 회사에 임대차 가계약 체결 요구
2015. 5.28.	한화생명은 면세점 입점으로 인한 임대료 수입, 공사비, 공사기간 중 기회비용, 손해배상금 등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익과 비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임대차 가계약 체결
2015. 7.10.	○○○○○○○○○○○○가 관세청으로부터 시내 면세점 특허사업자로 선정
2015. 8.28.	한화생명과 ○○○○○○○○○○○는 면세점 임대면적에 대한 확정 없이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의 주관 하에 (주)○○○○에 도급계약을 주고 리모델링 등 공사 시작
2015. 8.31.	□□□□□는 63빌딩에서 영업을 중단하고 퇴거
2015.11. 5.	한화생명과 ○○○○○○○○○○○는 면세점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2015.11.20.	한화생명과 □□□□□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2015.12.15.	한화생명과 ○○○○○○○○○○○ 간 임대차 본계약 체결
2015.12.31.	한화생명이 □□□□□에 손해배상금 72.2억원 지급
2019. 9.30.	○○○○○○○○○○○○는 63빌딩 면세점 영업을 종료

(2)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에 대한 관리비의 부당한 미수취

□ 회사는 2015.8.28. ○○○○○○○○○○○와 면세점 입점 준비 공사 관련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동 일자부터 ○○○○○○○○○○○의 책임과 판단 하에 63빌딩 임대공간에 대한 면세점 입점 준비 공사**를 하게 하였고,

* 2015.5.28. 가계약 체결시에는 임대차 개시일을 리모델링 공사 전날(2015.8.27.)로 정했고, 2015.8.28. 업무협약서에서는 임대차 개시일을 추후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2015.12.15. 본계약 체결시에는 임대차 개시일을 면세점 영업 개시일(2015.12.28.)로 정함

** ○○○○○○○○○○○와 (주)○○○○ 간 63빌딩 면세점 리모델링 공사 도급 계약 체결(2015.8.28.)

○ 공사기간 중 발생한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등)에 대하여 다른 유사 사례의 경우에는 입점 준비기간 중 임차인(7개사)으로부터 관리비를 모두 징구*하였으나, 면세점 입점과 관련하여 2015.8.28. ~2015.12.27.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7.98억원** 상당의 금액을 대주주(계열회사)인 ○○○○○○○○○○○에게는 수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고 대주주(계열회사)에게 금전적 이익(현금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2016.3월~2018.6월 기간 중 63빌딩 입점 준비기간이 필요했던 ○○○○○○○○○(주) 등 7개사에 대해서는 모두 관리비를 징구

** □□□□□로부터 수취한 2015년 월평균 관리비를 면세점 임대면적으로 조정한 후, 입점 준비기간(4개월)을 반영한 금액

□ 동 건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음

나.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

□ 보험회사는 자회사에 대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회사는 자회사인 (주)□□□□□□*(이하 '□□□□□□')로부터 매년 '사옥관리 수수료' 산정 내역을 제출받아 검토를 거쳐 '사옥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 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이며, 회사 및 한화 계열사의 사업시설 유지·관리가 주요 업무임

** □□□□□□가 인건비 및 경비 예상액 등을 '사옥관리 수수료'에 반영하고 그 산정 근거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제출받은 산정 내역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조정하여 '사옥관리 대행계약'을 매년 체결

2015년~2018년 기간 동안 □□□□□□가 '사옥관리 수수료' 산정 내역에 회사의 사옥관리 업무 등 위탁 업무와 무관한 (주)○○ 계열 공익법인인 □□□□*에 기부한 금액(이하 '기부금')을 포함하여 제출하였는데도,

* 1975년 ○○○ ○○그룹 前회장이 □□□□ 설립, 1981년 ○○○ ○○그룹 회장이 2대 이사장 취임, 2014.4월 ○○○ 회장이 이사장에서 퇴임한 후 □□□□ □□(現□□□□□□) 출신 ○○○ 부회장이 3대 이사장으로 취임

해당 기간 동안 회사는 기부금 10.98억원(2015년 2.14억원, 2016년 1.67억원, 2017년 3.01억원, 2018년 4.16억원) 상당액을 자회사인 □□□ □□□에게 '사옥관리 수수료-직영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사옥관리에 수반되는 전기료, 수도료 등 실비보상 비용 이외에 향후 일년간 □□ □□□□에 발생할 예상 인건비, 경비 등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항목

** 계약대상연도(계약 체결일) : 2015년(2015.3.16.), 2016년(2015.12.22.), 2017년(2016.12.23.), 2018년(2018.5.29.)

□ 동 건은 「보험업법」 제116조 규정을 위반하였음

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5.1.7.~2019.5.28. 기간 중 총 4,73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부지급 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4,732백만원)보다 2,082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재해로 인한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영구장해가 발생하였고, 동 사고가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며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에서 정한 재해장해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데도,

경미한 외부요인이 아닌 경우 전액 지급해야 하는 재해장해보험금을 약관에 없는 외상기여도를 적용하여 임의로 삭감 지급하는 등 총 13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4,276백만원)보다 1,626백만원을 과소 지급하였고,

- 실손의료보험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며, 회사는 2018.7.9.까지 동 비용과 관련된 청구 건에 대하여는 실손의료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 「의료법」 제4조의2(2016.9.30.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질병 특성상 보호자의 간병을 제한해야 하거나, 환자의 경제 상황상 보호자 등의 간병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의사 등이 인정하는 환자에 한해 제공되는 서비스

2018.7.10. 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을 보장대상이 아닌 간병비로 간주하도록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2018.7.10.~2019.5.28 기간 중 총 4,54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동 비용으로 청구된 실손의료보험금 411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 입원급여금, 골절진단금 등 정액보험금 지급을 담보하는 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함께 가입한 상태에서 약관상 보장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 해당 보험계약에 대해 각각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총 6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금만 지급하고 정액 보험금 44.7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동 건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 규정을 위반하였음

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해지 및 취소 업무 부담)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해지 및 취소 처리를 하는 경우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기초서류인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종목별 계약인수지침에서 정한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전부 해지할 수 있는데도,

회사는 2015.2.17.~2018.8.20. 기간 중 계약인수지침에서 정한 인수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고혈압 치료사실 등을 이유로 18건의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하였고,

- 보험약관 미교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취소(이하 '품질보증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고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5.1.2.~2019.3.29. 기간 중 보험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민원을 통해 품질보증해지로 계약이 취소된 1,50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반환하고, 이자 24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 규정을 위반하였음

마.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운영 불철저

- ☐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2017년, 2018년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 평가시 신계약가치, 상품손익률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동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보수를 각각 2018.1.2. 및 2019.1.25.에 지급하는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begin{aligned} * \quad &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 \bigcirc \bigcirc \bigcirc \\ &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div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bigcirc \end{aligned}$$

- ☐ 동 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을 위반하였음

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 내부 업무용시스템 및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망분리 불 철저

- ☐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하고,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며, 망분리 적용을 예외로 하기 위해서는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정보보호위원회 승인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6.12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를 도입하였으나, 검사착수일(2019.5.23.) 현재 내부 업무용 PC에 대해 쇼핑몰 등 외부 인터넷사이트*와 접속을 금지하지 아니하였고

* 직원 업무용PC에서 쇼핑몰, 마이크로소프트, 어학·독서통신 교육, 백신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인터넷사이트 연결을 허용

- 2014.12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를 도입하였으나, 검사착수일(2019.5.23.) 현재 데이터 베이스, 보안, 통신장비 등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와 웹응용서버 등 내부 정보처리 시스템 ○○대**를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아니하였으며

* 직접 접속 단말기 현황

구 분	인터넷 연결 단말기 대수	내부 정보처리시스템 접속현황
DB 및 개발담당자	○○	○○○ ○○○ ○○○○ ○○○대
보안담당자	○○	○○○ 등 보안시스템 ○○대
통신업무 담당자	○○	통신장비 ○○○대

** 내부망에 연결된 정보계 운영·개발 서버 ○○대, 계정계 테스트 서버 ○대 및 보안시스템 ○대를 전체 인터넷대역, 서비스번호 및 프로토콜에 대해 직접 접속을 허용

- IT운영팀 직원 ○○명 등 총 ○○○명*에게 원격 접속을 위해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면서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없이 운영한 사실이 있음

* IT운영팀 ○○명, IT보안파트 ○명, IT외주주문 인력 ○○명 등 총 ○○○명

(2)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계정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 ☐ 금융회사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는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하고 시스템마다 관리자 비밀번호를 다르게 부여하여야 하며, 비밀번호 입력 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입력 오류가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접속을 차단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비밀번호를 재부여하거나 초기화하여야 하는 것을 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대)의 관리자(Administrator) 계정 비밀번호를 2010.9월부터 검사착수일(2019.5.23.) 현재까지 장기간 변경하지 않았고, ○○○○○○대의 정보처리시스템을 동일한 비밀번호(○개)로 설정하였으며, 이 중 정보처리시스템 ○○대에 대해서는 연속해서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접속을 차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동 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였음

(붙임 1)

관계 법규

I. 보험업 관련 법규

1. 보험업법

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 ①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 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인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주주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2.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교환·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②~⑥ (생략)

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교환·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2.~3. (생략)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직무정지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② ~ ③ (생략)

제13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13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구)보험업법」(2017.4.1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5조의4,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6. (생략)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 등을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20 이하
 8. (생략)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 10.~11. (생략)
- ② ~ ④ (생략)

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8조. (생략)
9.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10~15. (생 략)

②~⑥ (생 략)

「(구)보험업법」(2017.4.18.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 (생 략)

9.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10.~15. (생 략)

②~⑤ (생 략)

2. 보험업법시행령

제57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제1호의 자산을 정상가격(일반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행위

3.~5. (생 략)

② 법 제11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주주에는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⑥ (생 략)

제59조의2(자회사와의 금지행위) 법 제116조제1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회사가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자회사로 편입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투. 보험회사가 법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9호	10,000

「(구)보험업법 시행령」(2017.10.17.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 10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우. 보험회사가 법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9호	5,000

II.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규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⑤ (생략)

⑥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생략)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③ ~ ④ (생략)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4. (생략)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4. (생략)

5. 주의

③~⑥ (생략)

제4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생략)

6. 제25조제6항(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7.~10. (생략)

③~④ (생략)

[별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34조 및 제35조 관련)

1.~26. (생략)

27.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임면 및 보수지급과 평가기준 운영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8.~41. (생략)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모. 법 제25조제6항(법 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6호	3,000

Ⅲ.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규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39조(감독 및 검사) 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②~⑤ (생략)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④ (생략)

2.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바.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0

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법 제21조 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 부터 제3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1.~2. (생략)
3. 단말기, 전산자료,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
4. (생략)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 1.~2. (생략)

3.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금지(단 업무상 불가피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생 략)
5.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단,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②~⑥ (생 략)

제32조(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비밀번호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가. 비밀번호는 이용자 식별부호(아이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 나. (생 략)
 - 다. 시스템마다 관리자 비밀번호를 다르게 부여
3. 비밀번호 입력 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입력오류가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접속을 차단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비밀번호를 재부여하거나 초기화 할 것

4.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2(망분리 적용 예외) ①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란 내부 업무용시스템을(규정 제12조의 중요단말기는 제외한다)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이 경우 필요한 서비스번호(port)에 한하여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별표 7>에서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7>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대책	세부사항
내부망 보안 강화	- 업무망에 반입되는 전산자료 대상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진단·치료 대책 수립
외부망 보안 강화	- 지능형 해킹(APT)차단 대책 수립 - 외부망을 통해 전산자료 외부전송 시 정보유출 탐지·차단·사후 모니터링 대책 수립
메일 시스템 보안 강화	- 본문과 첨부파일 포함하여 메일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예방 대책 수립 - 메일을 통한 전산자료 외부전송 시 정보유출 탐지·차단·사후 모니터링 대책 수립
단말기 보안 강화	- PC 사용자의 관리자 권한 제거 - 승인된 프로그램만 설치·실행토록 대책 수립 - 단말기 전산 자료 암호화 저장
원격 접속 통제 수립	- 원격접속 기준 및 절차가 포함된 보안정책 수립 - 불법 원격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인증,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 - 원격접속은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사전 등록자에 한하여 허용하며 원격접속 관리 기록부를 기록·보관 - 원격에서 접속하는 외부 단말기와 내부 업무용 시스템 구간의 암호화 통신 - 원격접속 사용자는 아이디·비밀번호 이외에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 - 원격에서 접속하는 외부 단말기의 악성코드 감염 예방 대책 수립·적용 - 원격접속 가능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의 접근 통제 수립·적용 - 원격으로 접속하여 수행한 모든 작업 내역 기록하고 매일 이상여부 점검 실시 및 책임자가 확인

IV. 제재 관련 법규 등

1.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 략)

7. 기관경고

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로서 그 동기·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2) (생 략)

(3)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4)~(6) (생 략)

다. (생 략)

라.~마. 삭 제

8. 삭 제

9. (생 략)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금융업관련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다. (생 략)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마. (생략)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⑥ (생략)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생략)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과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라. (생략)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른 제재 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1.~3. 삭제

③ ~ ④ (생략)

제46조의2(경합행위에 대한 제재) 이미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부당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제재한다.

1. 추가 발견된 위법·부당행위가 종전 검사종료 이전에 발생하여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제재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략)

제50조(직원제재의 감면) ① (생 략)

② 제재대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5에 정하는 "제재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제재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제재양정의 감경은 1회에 한하며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금융관련 범죄와 제45조 제1항 제5호의 "주의"조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금융위위원장, 감독원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③ (생 략)

V. 회사 내규 등

1. 회사의 기초서류(약관 및 사업방법서)

□ 회사 「무배당 대한중신보험 대한재해보장특약 약관」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별표 3 참조)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장해 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제5급 : 300만원

【별표 3】

장해등급 분류표

등급	신체장해
제5급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 탈출증은 제외)

【별표 4】

재해 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회사 「무배당 플러스보장보험Ⅱ 대한실손의료비보장특약 약관」 제13조(“실손의료비” 및 “보상대상의료비”의 정의 및 범위) ① 이 특약에서 “실손의료비”라 함은 입원, 통원 또는 처방조제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발생한 의료비 중 다음의 제1호 내지 제3호를 합한 금액으로 병원 또는 약국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를 말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업법상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중 본인부담금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의료비”란 실손의료비 중 다음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의료비를 말합니다.

9. 기타 아래의 경우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다. 진료와 무관한 경우(간병비, 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 회사 「무배당 한화생명 스마트통합종신보험 약관」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관련 약관> 「대한유니버설CI보험종신평안」, 「레이디퍼스트」, 「무배당 100세멀티CI 통합보험」 등 394개 보험상품의 약관

- 회사 「사업방법서」 제12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등) ①
-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종목별 계약인수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해지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주)

2. 제재조치일 : 2020. 11. 10.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기관경고, 과징금 1,834백만원, 과태료 199.5백만원
임 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주의적경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직 원	■ 감봉 2명, 견책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주의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조치생략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자산의 무상제공)

- ☐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수익성 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화생명보험(주)(이하 '회사')는 다음 (1), (2)와 같이 대주주(계열회사)인 (주)◆◆◆◆◆◆◆◆◆◆◆◆◆◆◆◆(이하 '◆◆◆◆◆◆◆◆◆◆◆◆◆◆◆◆')의 긴급한 사정으로 촉발된 기존 임차인인 ♡♡♡♡♡♡♡♡♡♡(이하 '♡♡♡♡♡♡')의 영업중단 손실 배상비용 등 72.2억원을 회사 스스로 부담하고,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 동안의 관리비 7.98억원을 수취하지 않는 등 대주주(계열회사)에게 총 80.18억원의 금전적 이익(현금 자산)을 무상 제공한 사실이 있음

(1) 면세점 입점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부당한 부담

- 2015.3월부터 회사는 ♡♡♡♡♡♡ 및 ◆◆◆◆◆◆◆◆◆◆◆◆와 함께 ◆◆◆◆◆◆◆◆◆◆◆◆가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의 기존 임대차 공간에 면세점이 입점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 동 협의 과정을 통하여 회사는 ◆◆◆◆◆◆◆◆◆◆◆◆와 면세점 입점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 영업중단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 2015.5.26. 회사는 면세점 특허신청 기일(2015.6.1.)까지 면세점 매장을 확보해야 하는 ◆◆◆◆◆◆◆◆◆◆◆◆로부터 임차의향서를 받고, 불과 2일이 경과한 2015.5.28.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임차인을 중도 퇴거시키는데 따른 손해배상 범위, 금액, 부담 주체 등에 대해 ◆◆◆◆◆◆◆◆◆◆◆◆와의 가계약서에 반영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2015.7.10. 회사는 ◆◆◆◆◆◆◆◆◆◆◆◆가 면세점 특허사업자로 '사전승인' 된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특수한 사정을 받아들여,

- 임대차 계약기간(2015.1.1.~2015.12.31.) 만료가 4개월 남아있는 ♠♠♠♠♠를 2015.8.31. 중도 퇴거시킴과 동시에 ◆◆◆◆◆◆◆◆◆◆측에 임대공간을 면세점에 맞도록 건물 구조를 확장·변경하는 공사(이하 ‘면세점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용하였음
- 회사는 면세점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야 ◆◆◆◆◆◆◆◆◆◆◆◆와의 임대차 본계약 체결을 위해 ‘임대료 감정평가(2015.11.5.~2015.11.19.)’와 기존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 손해배상금 감정평가(2015.11.20.~2015.11.24.)’를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 2015.12.15. 회사는 ◆◆◆◆◆◆◆◆◆◆◆◆와 임대차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구조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및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임대료 감정평가액’을 감안한 임대료 월 ○.○억원만을 본계약에 반영한 반면,
- ‘영업손실 손해배상금 감정평가액’을 감안한 손해배상금 72.2억원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자인 ◆◆◆◆◆◆◆◆◆◆◆◆에게 본계약 또는 별도의 청구 행위를 통해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 채,
- 2015.12.31. 기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발생하지 않았거나 대주주(계열회사)와의 특수한 거래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을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배상금 72.2억원을 면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고 대주주(계열회사)에게 간접으로 금전적 이익(현금 자산)을 무상 제공한 사실이 있음

(2)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에 대한 관리비의 부당한 미수취

- 회사는 2015.8.28. ◆◆◆◆◆◆◆◆◆◆와 면세점 입점 준비 공사 관련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동 일자부터 ◆◆◆◆◆◆◆◆◆◆의 책임과 판단 하에 63빌딩 임대공간에 대한 면세점 입점 준비 공사**를 하게 하였고,
- 공사기간 중 발생한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등)에 대하여 다른 유사 사례의 경우에는 입점 준비기간 중 임차인(7개사)으로부터 관리비를 모두 징구하였으나, 면세점 입점과 관련하여 2015.8.28. ~2015.12.27.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7.98억원 상당의 금액을 대주주(계열회사)인 ◆◆◆◆◆◆◆◆◆◆에게는 수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고 대주주(계열회사)에게 금전적 이익(현금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04조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舊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7호

나.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

- 보험회사는 자회사에 대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회사는 자회사인 (주)♣♣♣♣♣♣♣(이하 ‘♣♣♣♣♣♣♣’)로부터 매년 ‘사옥관리 수수료’ 산정 내역을 제출받아 검토를 거쳐 ‘사옥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15년~’18년 기간 동안 ♣♣♣♣♣♣가 ‘사옥관리 수수료’ 산정 내역에 회사의 사옥관리 업무 등 위탁 업무와 무관한 (주)한화 계열 공익법인인 ○○○○에 기부한 금액(이하 ‘기부금’)을 포함하여 제출하였는데도,

해당 기간 동안 회사는 기부금 10.98억원 상당액(‘15년 2.14억원, ‘16년 1.67억원, ‘17년 3.01억원, ‘18년 4.16억원)을 자회사인 ♣♣♣♣♣♣에게 ‘사옥관리 수수료-직영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16조

「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 제9호

舊「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 제9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의2

「보험업법 시행령」 제104조, [별표9]

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15.1.7.~’19.5.28. 기간 중 총 4,73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부지급 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4,732백만원)보다 2,082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재해로 인한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영구장애가 발생하였고, 동 사고가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며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에서 정한 재해장애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데도,

전액 지급해야하는 재해장해보험금을 약관에 없는 외상기여도를 적용하여 임의로 삭감 지급하는 등 총 13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4,276백만원) 보다 1,626백만원을 과소 지급하였고,

- 실손의료보험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며, 회사는 2018.7.9.까지 동 비용과 관련된 청구 건에 대하여는 실손의료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 「의료법」 제4조의2(2016.9.30.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질병 특성상 보호자의 간병을 제한해야 하거나, 환자의 경제 상황상 보호자 등의 간병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의사 등이 인정하는 환자에 한해 제공되는 서비스

2018.7.10. 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을 보장대상이 아닌 간병비로 간주하도록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2018.7.10.~2019.5.28 기간 중 총 4,54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동 비용으로 청구된 실손의료보험금 411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 입원급여금, 골절진단금 등 정액보험금 지급을 담보하는 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함께 가입한 상태에서 약관상 보장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 해당 보험계약에 대해 각각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총 6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금만 지급하고 정액 보험금 44.7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27조의3

舊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

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해지 및 취소 업무 부당)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해지 및 취소 처리를 하는 경우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기초서류인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종목별 계약인수지침에서 정한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전부 해지할 수 있는데도,

회사는 2015.2.17.~2018.8.20. 기간 중 계약인수지침에서 정한 인수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고혈압 치료사실 등을 이유로 18건의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하였고,

- 보험약관 미교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취소(이하 '품질보증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고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5.1.2.~2019.3.29. 기간 중 보험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민원을 통해 품질보증해지로 계약이 취소된 1,50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반환하고, 이자 24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27조의3

舊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

마.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운영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2017년, 2018년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 평가시 신계약가치, 상품손익률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동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보수를 각각 2018.1.2. 및 2019.1.25.에 지급하는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제6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별표2]

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 내부 업무용시스템 및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망 분리 불철처

-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하고,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며, 망분리 적용을 예외로 하기 위해서는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정보보호위원회 승인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6.12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한 망분리를 도입하였으나, 검사착수일(2019.5.23.) 현재 내부 업무용 PC에 대해 쇼핑몰 등 외부 인터넷사이트와 접속을 금지하지 아니하였고
 - 2014.12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를 도입하였으나, 검사착수일(2019.5.23.) 현재 데이터베이스, 보안, 통신장비 등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와 웹응용서버 등 내부 정보처리시스템 ☞☞대를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아니하였으며
 - IT운영팀 직원 ▽▽명 등 총 ☆☆☆명에게 원격 접속을 위해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면서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없이 운영한 사실이 있음

(2)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계정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 금융회사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는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하고 시스템마다 관리자 비밀번호를 다르게 부여하여야 하며, 비밀번호 입력 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입력 오류가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접속을 차단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비밀번호를 재부여하거나 초기화하여야 하는 것을 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대)의 관리자(Administrator) 계정 비밀번호를 2010.9월부터 검사착수일(2019.5.23.) 현재까지 장기간 변경하지 않았고, ○○○대의 정보처리시스템을 동일한 비밀번호(2개)로 설정하였으며, 이 중 정보처리시스템 ◇◇대에 대해서는 연속해서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접속을 차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 제5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제2호 · 제3호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1항, 제3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전자금융과	생명보험검사국 IT·핀테크전략국
연 락 처	02-2100-2945 02-2100-2975	02-3145-7950 02-3145-7350